光州日報

광주 25/32℃ 목포 25/30℃ 여수 25/29℃

단기 4343년 (음력 7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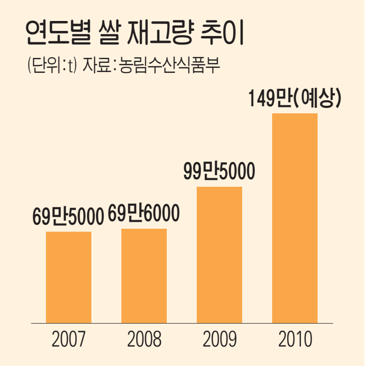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62호 1판 2010년 8월 26일 목요일

재고쌀 재앙 풍년이 두렵다

전남 올해 10만t 보관할 곳도 없어…北지원 재개만이 해법



전남 들녘에 풍년의 기운이 짙어가고 있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2008년 대북 쌀 지원이 끊긴 이후 쌀 재고량이 급증하면서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재고 증가와 이에 따른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풍이 들 경우 풍년→재고증가→쌀값 하락→농가 적자→농사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을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우선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작목전환을 유도하는 등 근본적인 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내 쌀 재고량은 정부양곡이 39만7877t, 농협 물량 5만9000t 등 45만6000여t 달한다. 특히 공공비축미를 쌓아 놓은 정부양곡 재고는 2005년 생산분 5만3000t까지 포함돼 있어 악성 재고물량이 심각한 수준이다.

재고가 쌓이면서 쌀을 쌓아둘 창고 공간도 갈수록 줄어 정부양곡 창고의 경우 보관능력은 58만2000t인데 반해 수용 가능 용량은 전체의 28.1%인 16만4000t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쌀 보관 창고는 50%는 재고로, 50%는 해당 연도의 것으로 채워져야 창고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재고가 쌓이면서 산지 쌀값도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8월을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가 13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1000원)에 비해 12.5% 하락했다. 이는 대북 쌀 지원이 끊긴 2008년(16만2000원)에 비하면 18.5%나 떨어진 수치다.

문제는 올해 전남에서만 88만t의 쌀이 새로 생산될 예정으로 이 가운데 61%인 51만9000t이 공공비축이나 농협 등을 통해 매입돼 창고로 보내지면 쌀을 아예 야적해야 될 형편이라는 데 있다. 전남도는 수확기인 10월이 되면 기존 재고분에 올해 매입분까지 더해져 9만8000t은 아예 창고에 보관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타 시·도로 쌀을 보내 저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쌀 재고 현상이 전국적인 상황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우선 단기적인 대안으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 주고 공급량 조절 정책 등을 통해 장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 다시면 장동철씨(51)는 "3년째 풍년이 확실시 되지만 제값 받고 팔기가 힘들어 마음이 오히려 무겁다"며 "장기적인 대책도 좋지만 대북지원 재개 등 당장 숨통을 틀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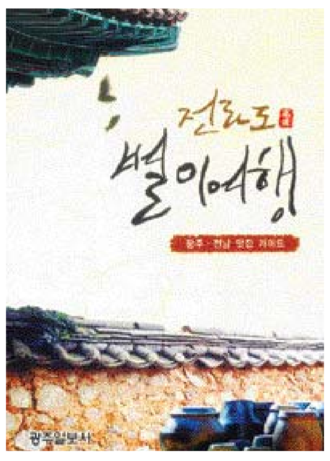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풍년을 예고하듯 들녘의 벼는 노랗게 익어가고 있지만, 농심(農心)은 애가 타고 있다. 쌀 재고량이 급증하면서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오후 광주 남구 승촌동 김판귀(70)씨가 다 익은 벼를 만지며 근심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알 림

'전라도 별미여행' 추가 인쇄

오늘부터 독자들에게 무료배포 합니다



최근 광주일보가 제작한 맛집 가이드 '전라도 별미여행'이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절찬리에 배포중에 있습니다. 광주일보는 맛집 가이드를 원하는 독자들의 요구가 쇄도함에 따라 추가제작을 마치고 26일부터 2차 배포에 들어갑니다.

이번 '전라도 별미여행'에는 광주의 5개구와 전라남도 22개 시·군별로 엄선된 소문난 맛집 200여곳을 비롯 숙박시설, 특산품, 축제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별미여행'은 독자들께서 가까운 광주일보 지사나 지국에 전화로 요청하면 무료로 배포해드립니다.

▲배포처=광주일보 광주시내 지국 및 전남 시·군 지사. 지국·지사 연락처는 광주일보 5면 하단 광고 참조.

▲문의=(062)220-0561, 220-0551

光州日報社

예술공간 된 原電

영광선 설치미술…고리선 안도 다다오 건축물

원자력발전소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설치미술가 김수자씨의 영상 작업을 선보이고, 고리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다다오의 건축물을 세우는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문화 명소로 가꾼다.

영광원전에서 상영될 김수자씨의 영상작품.

국립현대미술관은 25일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문화 상품화 하는 '원전 아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오는 9월3~19일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설치미술가 겸 서양화가 김수자의 영상 작업을 상영한다"고 밝혔다.

'원전 아트 프로젝트'는 2012년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 맞춰 한국의 미술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행사다.

김씨가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스페인의 란자로테 사화산과 과테말라의 파카야 활화산 등을 소재로 자연의 소중함을 담아낸 '지·수·화·풍'이다. 또 7월 그린란드 빙하를 찍은 '워터 오브 에어'(Water of Air)도 처음 공개된다.

이들 작품은 영광 원자력발전소 내 방류제(방파제의 일종으로 원자력발전으로 데워진 바닷물을 식히는 역할을 함)에 가로 5m, 세로 2m 크기의 스크린을 걸어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상영된다.

김씨는 1990년대부터 세계 주요 미술관 전시 및 상파울루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 등에 참가한 세계적인 작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또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일본인 건축가 안도타다오의 건축물을 설치하고, '자원과 재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도 전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월성·울진원자력발전소에는 국내외 작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미디어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설치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소통한다더니 일방통행"

광주시 사직문화타운 주민설명회 불만 쏟아져

광주시가 민선 5기 들어 행정수요자인 지역주민 중심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첫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사전정보 미제공, 의견 반영 시스템 부재, 주민 관심사에 대한 설명 부족 등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만 키웠다.

광주시는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이하 교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25일 오전 10시 남구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영상관에서 인근 남구 사직동 및 양림동 주민, 상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 광주시가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발전연구원에 발주한 교류타운 조성사업 계획용역은 애초 지난 12일 완료돼야 했지만 강운태 광주시장이 취임 이후 '수요자인 지역주민 중심의 정책 및 사업 실시'를 강조하면서 광주시가 용역을 중지한 채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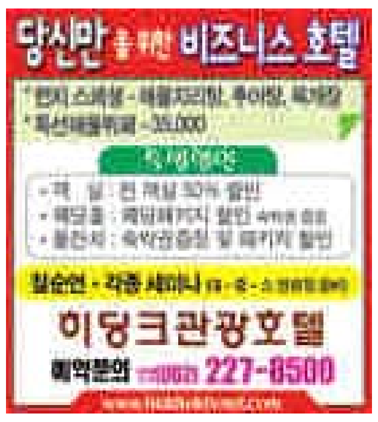
이날 용역을 맡은 광주발전연구원은 주변 5대 특화거리, 포크 뮤직 특화지구, 아시아음악하우스, 음악공원, 야외음악당, 음악공원 등 신규 시설배치와 관련 축제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사직문화산업단지 위치 등에 대해 최종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연구원의 발표가 끝난 뒤 주민들은 광주시의 안이한 주민설명회 준비를 질타하고 일부 계획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했다.

주민 안기석씨는 "광주시가 자꾸 일을 벌이는데, 주민들에게 사전 정보도 전혀 안주고, 설명회 자리에서도 아무런 자료도 안 준다"며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경천씨는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토지보상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고 주민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만 반복한다"며 "팔각정을 증축한다고 하는 데 그렇게 해서는 광주시의 전망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양상민씨는 "온통 음악시설밖에 없으며 그것도 전문가를 위한 시설이 대부분으로 그만큼의 수요가 있을 지 모르겠다"며 "다용도시설을 주로 하고, 이용자도 그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이밖에 다양한 각종 주민의견이 제시됐으나 얼마나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는 용역기관과 광주시가 결정하도록 돼 있고, 주민들도 실제 사업에 착수한 뒤에서나 반영 여부를 알게 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시는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일부 반영한 뒤 다음달 초 관련 용역을 완료할 방침이지만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해 설명회가 여전히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